

특집

4·13 총선 평가

4.13 총선이 57.2%라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렸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낮은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40% 이상이 자신의 투표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총선연대로 대표되는 시민운동까지 나서 유권자들의 '귀중한 한표'를 독려했지만, 그 결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에 있음을 감안할 때, 16대 총선에서 드러난 최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예상케 하는 심각한 지표다.

실제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273명은 전체 유권자 3천3백4십만명 가운데 50.01%만을 대표할 뿐이며, 선거권을 안 20세로 제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1백여만 명을 정치적 '금치산자'(禁治產者)로 묶어놓은 현행 선거제도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16대 국회는 국민의 반수도 대표하지 못하는 정통성이 부족한 입법기관으로 그 첫발을 내딛고 있다.

낮은 투표율의 문제는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이 후보를 낸 선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총선 평가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평균투표율 13%의 '성과'를 넘어 ('노동자 민중의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50%에 달하는 지역 유권자들이 기꺼운 이유와 원인을 살피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기성 정치구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린 파반수 유권자들의 존재를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재단해버리거나, 유권자들에게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고르라고 계도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처방과 진단 없이 이들을 투표소로 무조건 내몬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권자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그 해결책을 유권자 내부에서 찾으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법이다.

정치사회의 '근대화'는 정치구조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계급·계층간의 갈등을 제대로 반영할 때 가능하다. 정치사회의 '현대화'는 제도화된 정치의 장에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사회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벌일 때 가능하다. 정치사회의 '근대화'와 '현대화'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정도를 가능케 하는 척도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이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편집실

특별취담 4.13 총선, 어떻게 볼 것인가 정영태 강원대 김래현 이재영 이태호

4.13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진로

(자료) '주목할 후보'들 득표 현황

4.13 총선, 어떻게 볼 것인가



사진: Daeyong

때: 2000. 4. 19(수)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 정영태 인하대교수 정치학
 토론: 김태현 민주노동 정책기획실장
 강원택 국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팀장
 이태호 총선연대 정책기획국장

장르: 윤호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

정영태 이번 총선은 이전 선거와 비교했을 때 총선 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민주노동당의 선전 등 선거 과정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의미있는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은 자명한데, 우선 이번 총선에 대해 **대략적으로 평가해보죠.**

강원택 학자 입장에서 볼 때 흥미로운 선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진보세력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용하는 분위기가 된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리고 총선연대 활동도 학계에서 평가가 이뤄지겠지만,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대해 결속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응집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시민사회가 선거로는 못낸 기존 정치권의 메카니즘을 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나 차후 선거에서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태호 변하지 않는 보수붕당정치, 계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반란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치개혁은 IMF 이후 최대 과제였고, 다른 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체된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제제기였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결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빴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으로 지역감정이 균열을 보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안부재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역감정이 정치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수명이 다하면서 지역감정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 체제에서 불안정한 양당체제로의 이행은 유권자 운동의 진출과 진보정당의 성장 속에서 지역감정의 균열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김태현 총선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세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조합원을 의식화하며,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을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언론의 외면, 진보진영과 시민운동의 진술차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대응 부재로 목표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울산 북구만큼은 당선될 거대했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혼란은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패배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의 규율과 조직 민주주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영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는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시민운동과 진보운동의 도전이었습니다. 낙천낙선운동으로 전개된 시민운동의 도전은 의제 선점과 인적 청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대안세력으로 자임하며 구조와 제도에 도전한 민주노동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던 선거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97년 대선에서 처음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당시 어떤 진영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신자유주의가 쟁점으로 논의되어

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군부독재청산, 정권교체 등 정치적 담론이나 논쟁이 없었던 선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퇴행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선거 쟁점이 개인비리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큰 한계였습니다.

정영태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구조가 자리잡았다는 점과 영남 지역의 한나라당 몰표에서 드러나듯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김원택 앞에서 이태호 국장이 지역주의에 일정 정도 균열이 일어났다고 말했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가 여전하며,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에서의 JP 약화는 지역주의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유권자들은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간주했고,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 표를 던지는 투표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남권에서의 한나라당 몰표가 대표적입니다.

김태현 이전과 비교할 때 지역감정은 강화하지도 약화되지도 않았으며, 여진하다고 봅니다. 기존 정당이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기반하

지 않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지 않는 한 지역주의는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성 정치권이 정치개혁은 물론 지역주의 타파를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기성 정치권 외부로부터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재영 김태현 실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지역주의가 지역에 기반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들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물러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권력 중심이 의회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역주의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주의의 또 다른 측면, 즉 지역주의가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이나 생활상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측면에서의 지역주의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지역주의가 중앙정치를 좌우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체의 활성화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호 지역감정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므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민주노동당이 일상활동의 영역에서
새롭고 참신한 방법과 내용을 개발하고
이미지업(image-up)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민주노동당이 전국정당으로
성장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영태 인하대교수



Wolberg.com

1987년 이후 JP가 지역감정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꼭지점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자민련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을 가깝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영남권의 한나라당 물표는 '반DJ 정서'에 기반하고 있어 DJ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면 서 자연스럽게 약화될 겁니다. 이점을 생각할 때, 지역감정이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겠지요.

강원택 사실 15대 총선까지는 무소속 당선자가 영남권에서 많았습니다. 이번에 호남권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4명이었던 점은 정권교체로 권력의 중심지가 호남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임여를 차지하기 위해 엘리트들이 권력의 배경지역인 호남으로 몰린 것이지요. 지역감정의 핵심은 영호남간의 문제이지, 충청권의 지역감정은 상대적으로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에 양당구도가 출현한 것은 영남권표가 한나라당으로 결속한 요인이 컸습니다. 자민련의 몰락은, 충청권에서의 지역명주가 JP에서 이인제

로 바뀌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지, 지역주의가 완화되었기 때문은 아니지요.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하여튼 이번 영남권의 한나라당 물표는 '이인제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여권 후보의 분열 때문이었다고 판단한 영남권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반DJ 감정'을 결집시킨 것이지요.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이상으로 지역감정을 선동한 민주국민당조차도 영남권에서는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강원택 이번 선거의 또다른 특징인 양당 체제는 세계적으로 드문 형태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자민당이 20% 정도 득표하여, 선거 수준에서는 3당 구도가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당구조는 지역주의와 관련이 있어 고정되기보다는 유동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볼 때, 좌우간의 갈등은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이고,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인데, 외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에서 계급을 초월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노동자와 중산층과 상류층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틀을 지역주의에서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 양당체제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양당체제가 지역주의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선을 두고 정쟁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정영태 논의를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옮겨볼까요? 『뉴스위크』, 『이코노미스트』 같은 외국 잡지도 총선연대 활동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아마도 외국 언론에서 96/97년 총과업 당시와 같은 관심을 쏟은 듯합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 승자가 총선연대가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태호 낙선률을 애초 50%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70%로 나와 20% 정도의 성과를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선운동이 20% 가량의 지지율 변동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낙선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낙선운동 초기에는 지역에서도 고개를 절레 흔들

었습니다만, 일단 발동이 걸린 후 잘 진행되었습니다. 풀뿌리 단체들이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흩어져있던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유권자운동의 조직적 가능성을 연 것이지요.

강원택 이번 선거에서 총선연대는 사실상의 주인공이었어요. 총선연대는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 쟁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송국에서 낙선자 발표를 생중계 한 것만 보더라도 총선연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연대는 의제 선정(agenda setting)에도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선연대가 제기한 이슈대로 갔습니다. 이 점에서 총선연대 활동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총선연대운동의 한계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병역이나 납세 같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신자유주의 문제, 총선 전에 제기된 남북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쟁점들이 중요한 대결거리가 되지 못했지요. 이런 현상은 기성 정당이 쟁점대결을 회피한 측면도 있지만, 총선연대 활동이 직간접으로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



주변에서 진보세력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용하는 분위기가 된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김원택 | 과총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다. 이런 흐름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을 확대시켜 낮은 투표율을 낳았고, 나아가 선거쟁점을 지역주의와 인물 차원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정영태 사실 강 연구원의 지적은 낙선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 신인이 낙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낙선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덜 나쁜 사람이고 르려다 더 나쁜 사람이고 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요.

이태호 의정활동에 대한 세세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낙선대상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있어요. 또한 몇몇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가 낙선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의 한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낙선운동은 발전이 정채된 정치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보스의 낙하산 공천에도 일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 운동이 후보의 당락을 결

정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김원택 물론 총선연대 낙선운동의 의미와 성과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천 씨의 경우가 흥미로운데, 그는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별 흥미 없는 사람이었지만 야당시절 자신이 약속한 특별검사제와 인권법을 여당이 되어 반대한 점 때문에 낙선 대상이 되었습니다. 낙선운동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낙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좋은 케이스라고 보며, 기성 정치권에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총선이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닌 개인 평가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총선연대의 외세 선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정영태 작년 말에 참여연대가 UNDP와 공동으로 빈곤보고서를 발표하여 빈부격차 문제가 여론의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개혁-인물교체'라는 의

제선정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총선 연대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을 미리 고려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태호 사실 개인의 자질평가라는 의제는 총선연대가 만들어낸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가 정책경쟁 선거였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선거 시기에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의 이슈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총선연대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이 문재인물의 낙선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신자유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IMF를 누가 가져왔고, 국민의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으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국회가 '뇌사국회', '식물국회'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은 어느 정도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상승으로도 갔다고 봅니다.

강원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민주·반민주' 같은 쟁점으로 형성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정책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 철저하게 인물 문제로 치달은 적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저도 동감입니다. 총선연대가 정치개혁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선연대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로 좁혀진 측면이 큼니다. 정당 명부비례대표제나 후보자의 민주적 공천처럼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쟁점들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정치개혁의 핵심문제들에 대한 초점을 흐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영 총선연대 운동이 좋은 성과를 낸 데에는 원래 '네거티브 전략'이 잘 먹혔다는 점도 한 몫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혁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혁명의 주체와 대상 모두 보수정치권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찍지 말라' 다음에는 '누구를 찍자'는 대안이 당연히 제기되는데, '찍지 말자'에만 머물렀습니다. 저는 '찍지 말자'의 다른 한편에 정당 명부제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선운동과 더불어 '1인2표제'가 총선연대 활동의 양날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운동 장사가 잘 되니까 정당 명부제가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연대에서 인물 교체의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사실 '뇌사' 국회라고 불리는 15대 국회는 정치 신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인물 교체만으론 안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국회도 역시 15대 국회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깊은 상황에서 인물 교체

총선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세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조합원을 의식화하며,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을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태호 우리는 기획단계부터 대안없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감수하며 전략전술을 짰고,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으로 엄청난 힘을 모았다는 점은 정당하게 평가받아 야 합니다. 낙선운동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낙선운동을 펼친 것은 지역 시민단체의 결집이라는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지역운동의 자신감 회복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낙선운동은 수도권과 지역을 하나로 묶은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김원택 총선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어렵게 여기는 정당명부제는 총선연대 회원단체들이 의견일치를 이루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들 가운데

는 정치권 진출을 위해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기존 정치권 공격에는 하나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을 겁니다. 선거제도 개정에 시도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점에서 낙선운동이 시민단체를 묶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태호 결론적으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특수한 운동입니다. 이제는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때입니다. 총선연대는 해소할 예정이며(총선연대는 4월 20일 해산했다 편집자), 이후 16대 국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직 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이제 진보정당의 총선 참여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봅시다. 민주노총의 후원을 받은 민주노동당이 한성도 얻지 못했는데요. 특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울산 북구에서조차 당선자를 내지 못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기대하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재영 단 한명의 당선자도 없다는 점에서 분명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득표율에서 민중당의 2배에 달하는 12% 정도를 얻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책 경쟁을 하지 못했지만, '정리해고 반대'나 '해외매각 반대' 같은 몇 가지 쟁점에서는 다른 당에 비해 정책적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 조직과 당원들이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경험을 키웠다는 점에서도 이번 총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현 물론 거품이 있었겠지만 민주노동당이 연말연초의 여론조사에서 20%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2~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썩고 낡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광범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선거의 쟁점이 정책이 아닌 개인의 자질문제로 하향되면서 정치적 허무주의나 냉소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제기한 신자유주의 문제나 사회정책은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태호 민주노동당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진보진영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진보진영이 민주노동당

과 청년진보당으로 쪼개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왜소한 느낌을 주면서,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대표적 정치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데 손상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의제 제기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명확하게 치고 나간 의제가 없었습니다. 상향식 공천이나 정치개혁은 우리가 한다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의 사활이 걸렸던 문제인 1인 2표제는 여야가 무산시켰을 때 가두유세나 거리시위를 조직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농성이라는 소극적인 전술에 의존했고, 선거기간 중에도 주요 이슈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민주노동당의 지지로 이끌어내려는 중앙 차원의 캠페인이나 드라이브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추진력과 실천력, 기획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원택 동감합니다. 사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상당한 이점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생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층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이나 드라이브가 없었습니다.

정영태 몇가지 유리한 환경이 존재했는데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바람을 일으

www.kbs.co.kr



한명의 당선자도 없다는 점에서 분명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득표율에서 민중당의 2배에 달하는 12% 정도를 얻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팀장

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권이 총선연대 활동은 많이 키우고, 민주노동당 쪽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온 곳에서도 투표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심각하게 짊어볼 대목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재영 우선 전국 차원에서 의제를 형성하고 쟁점을 부각시키는데 있어 중앙당이 별다른 역할을 못했습니다. 당 인력과 재정이 후보를 낸 선거구로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당중앙이 공동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당선지역으로 꼽았던 울산 복구의 경우 저희 예상으로는 70% 이상 득표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 권한 위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초기부터 모든 당직을 선거로 선출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투표로 하는 등 형식적 민주주의는

활발했는데 비해, 그에 걸맞은 수준있는 내용과 자질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동진영이 유세장 동원이나 가두 홍보에서는 기성정치인들보다 앞서지만, 가정과 상가 등 일상생활의 장에서 보수정당이 수십년간 위어놓은 땅에 침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원택 울산 복구 문제를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재영 우선 후보선정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울산 복구는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압도적인 지역구인데, 울산 복구가 아닌 울산시 지부 차원에서 후보를 정선하는 규약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점은 규약을 만들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였고, 지구당 차원의 조직을 만들기엔 역부족이었던 우리당의 조직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당내 정치그룹간의 경쟁 문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치그룹이 당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울산 복

구의 경우 정치그룹간의 경쟁이 당의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원택 저는 해당 선거구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을 얼마나 찍었는가가 노동자정치세력화 논의의 핵심문제라 보는데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얼마나 지지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체는 진보적이지만, 조합원들의 성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이 임단투를 위해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훈련해 온 데 비해,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상대적으로 빈약했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표를 던진 조합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태현 작년 말에 실시한 조합원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볼 때, 이재영 국장의 지적대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일반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정당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기는 했습니다만, 과반수가 지지정당이 없는 부당파였습니다. 조합원들보다 간부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한계이기도 합니다.

창당한지 얼마 안되었다는 한계는 있

지만, 일반 조합원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자기정당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실천이 없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창원이나 울산 등 민주노총 출신이 후보로 나간 지역에서는 노조간부들의 열성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후보가 민주노총 출신이 아닌 지역구에서는 노동조합 차원의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아까 이태호 국장님이 청년진보당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청년진보당은 권역별정당명부제를 예상하면서, 지역거점이 없으면서도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우리당과 청년진보당의 후보가 겹쳐 나온 것은 유감이지만, 후보 조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얻은 표는 대부분 조직된 표였지만, 청년진보당의 표는 단순한 반발표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후보가 겹친 곳에서 청년진보당은 3%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진보당에서 나온 20대 여성후보의 지지율이 그 당 남성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았다는 점은 청년진보당의 이벤트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정영태 국민승리21의 대선전략과 민주노동

낙선운동은 발전이 정해진 정치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보스의 낙하산 공천에도 일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 운동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이태오 총선연대 정책기획국장



Lee Tai-oh

당의 이번 총선전략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재영 국민승리21 투표전략의 실패 이유는 그 대상을 너무 폭넓게 열어놓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코리아'는 원래 민족주의적 선거 슬로건이 아니라, '일어나라 노동자'로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제정이 모자라 '코리아'에서 끝난 속사정이 있습니다. 백기완 후보가 얻은 20만표의 상당부분은 수도권 지역의 고학력층과 대학생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반해, 당시 권영길 후보가 얻은 30만표의 상당 부분은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계급투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당이 발전하면 '예보르스키 달레마'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급 투표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전략 지역 중심으로 출마했고, 상당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선거전략 논의가 너무 길면서 실제적인 선거운동을 재빨리 시작하지 못한 점에 있습니다.

정영태 제가 있는 인천 서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7.3% 정도를 얻었습니다. 예상보다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같은 공단지역은 기본적인 조직 여건이 된다고 여겨지지만, 인천 서구같은 수도권에서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일상 활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은 전국의 정치풍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수도권에서의 민주노동당 기반은 약합니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상활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필요한 영역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일상활동의 영역에서 새롭고 참신한 방법과 내용을 개발하고 이미지업(image-up)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전

국정당으로 성장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태호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지층의 의연을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계급투표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당의 주요 기반이었던 민주노총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재영 민주노총은 재정지원과 인력동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권영길 대표가 출마한 창원 지역이 잘 보여주듯, 한국노총 산하조직에서도 의미있는 후원을 하기도 했으며,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내어 당의 선거운동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오늘 논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재영 물론 특정 제도가 좋다고 고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국정치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당명부제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신생정당이나 신진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불평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선거비용이 1억원 정도 되는데 모든 경비를 정당운영비로 몰아버리면, 아무리 써도 법정비용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영비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법이 큰 방향에서 '뭉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뭉는 못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원택 이번 선거법을 살펴보니 일본 선거법과 유사한 측면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우 크로스-보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회에서의 결정이 개개인 수준을 넘어 결정됩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낙선운동식의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를 갖습니다. 의원이 개인적인 소신이 있더라도 이것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제도적 제약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영태 이번 총선은 21세기의 첫선거라는 점과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율이 사상 최저로 낮았고, 정책경쟁의 장이 되지 못했으며, 지역감정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상당한 열매를 맺었고, 민주노총과의 연대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선전했다는 점에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평가가 각 조직의 향후 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